



이태진 교수

태학사/A5신/450면/15,000원

역사의 법정에는 휴정이 없다. '원고'인 현재는 '피고'인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해 심리(審理)한다. 하지만 역사의 최종 판결은 끊임없이 지연된다. 숨겨진 사료가 발굴돼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법조문이 바뀌기도 한다. 발터 벤야민이 말했듯, 구원받은 인류에게 특징이 있다면 그들의 과거가 매순간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대사의 법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우리 역사의 법정에는 음습한 골방에 죽음을 차고 유폐된 군주가 있다. 고종이 바로 그다. 그는 대원군과 민비의 암투 사이에 긴 무능하고 유약한 군주로서 망국과 식민화의 '원죄'를 뒤집어 써왔다. 최근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57)가 근대사의 법정에 항소를 제기했다. 『고종시대의 재조명』(태학사)은 그의 '항소이유서'다.

"고종시대에 대한 부정적 역사상은 일본 침략주의에 의해 조장됐습니다. 일본은 러일전쟁 후 자신의 침략성을 은폐하기 위해 고종황제와 대한제국 정부의 무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역사왜곡입니다."

식민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종시대는 오히려 역동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대한제국이 광무개혁을 통해 자력 근대화에 나서자 일본은 서둘러 러일전쟁을 일으켜 대한



'비운의 군주' 고종을 위한 변명

『고종시대의 재조명』펴낸 이태진 교수

근대사의 법정에서 고종은 무능하고 유약한 군주의 대명사로 낙인찍혀 왔다. 이태진 교수는 이런 부정적 역사인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오히려 고종은 민국정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한다. 고종의 근대지향적 개혁이 성과를 거두자 일본은 서둘러 대한제국을 강점했다는 것이다.

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침탈했다는 것이다.

"고종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의 개화를 추구한 개명군주였습니다. 그는 서양의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정치사상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군주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죠."

또 하나 고종의 근대지향성은 '민국정치' 이념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영조·정조의 정치이념을 계승한 것으로, 국가의 구성에서 군주와 민을 동등하게 인식함으로써 신분적 불평등을 넘어서려 했다. 고종의 정치사상 자체에 근대적 요소가 이미 짙고 있었던 것이다.

고종이 펼친 자생적 근대화를 향한 노력의 강력한 증거로 이교수는 대한제국의 도시개조 사업을 꼽는다. 1896년 아관파천 후 시작된 이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으로, 청나라와 일본의 강압에서 벗어나 독립국의 면모를 일신하려 했다.

"이는 서양문물 수용의 전기가 되는 사업입니다. 황제의 본궁을 경운궁으로 정해 모든 도로를 이곳에 집중하게 했고, 민의가 수렴되던 장소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근대화 양상이 성과를 거둬가자 일본은 위기를 느끼고 군사침략으로 정책을 급전환합니다."

고종의 근대 지향성을 입증하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다. 고종이 태극기 제정을 주도하면서 군민일체 사상을 담으려 한 사실, 근대화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수집을 위해 왕실에서 3만여 권의 서적을 구입한 점, 일본 밀정의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비밀 정보기관인 '익문사'를 운영한 일 등을 이교수는 실증했다.

고종의 공과 객관적으로 따져

"그렇다고 고종이 성공적인 군주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인 왜곡과 매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그 시대와 인물의 공과를 따져보자는 거죠. 고종은 근대화의 추진세력으로서 관료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청과 일본의 정책에 말려든 것도 한계였습니다."

일제가 우리 근현대사에 드리운 왜곡의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교수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양동작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독립운동사나 민족운동사로 우회하는 측면공격과 왜곡의 현장에 직접 파고드는 정면공격을 동시에 구사해야 올바른 근대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이 '사안' (史案)을 넓힐 것도 제안한다.

"근대사 연구자들은 대부분 개항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습니다. 앞 시대와의 연속보다는 단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망국의 원인부터 찾게 되고 이는 결국 식민사관의 덫에 빠져들 위험성이 높아요. 오히려 영조·정조의 문화역량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천착해야 합니다."

— 박천홍 기자